

보도자료	2021년 6월 25일(금)	7매
제목	<민주당 앞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문의	이명목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010-4311-074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010-4260-0388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010-4258-0614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010-7275-4114
집걱정없는세상연대		
<p>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p>		

민주당 감세안에 성난 시민들의 퍼포먼스와 기자회견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송영길 대표 가면쓰고 더불어민주당 풍선폭탄 터트려



지난 18일(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후퇴시키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커졌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서민을 무시하고, 집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정입니다. 6월 25일(금) 11시,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반서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구 분	내 용	
일 시	2021년 6월 25일(금) 오전 11시	
장 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사 회	김 경 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순 서	
여는 말	이 명 목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언 1	오 건 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발언 2	김 가 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발언 3	송 기 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발언 4	김 혜 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퍼포먼스	부동산 부자감세, 투기조장 더불면 터진다!	
선언문 낭독	이 원 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질의 응답	언론사 질의 및 응답	

<참가자 발언 요약문>

성 명	내 용
이 명 목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행위원장	우리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다. 집없는 50%의 국민보다 5%의 집부자를 걱정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며, 많은 국민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부자 감세를 강행한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민주당 정권을 거부하고 퇴출시킬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오 건 호 내기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민주당은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 정당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나라다운 나라’를 주창하고선 ‘서민의 허리가 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촛불시민이 만든 촛불혁명정부가 시민의 주거권을 억압하는 촛불배반정부로 가고 있다. 우리 시민은 민주당의 부자감세를 거부한다.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응징할 것을 경고한다.
김 가 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노동은 평가절하되고, 주거 불안 극심해지는 청년들에게 민주당의 결정은 자산불평등을 더 공고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입자 청년들은 '판'에 끼기는 커녕 1천만원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20대는 기초법상 주거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방조하고 세금 줄여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집답지 못한 집, 위반건축물에 살면서 오르는 보증금, 월세 걱정해야하는 청년에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조세 상식이다. 부자감세 이전 청년들이 정말로 어떤 주거 문제에 처해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송 기 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집값대책과 6월 18일 의원총회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송영길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깎아줘야 내년 선거에서 100만표를 더 얻을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집부자의 표를 얻어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김 혜 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종부세 개악과 관련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와 여당이 집을 돈으로 보는 사회를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집이 주거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략하게끔 만들고 있다. 집값 안정을 외치며 등장한 정부가, 그렇게 정권을 얻고,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민을 뒤로하고 투기광풍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그 광풍을 만드는 ‘광풍의 핵’이다.

<기자회견 & 퍼포먼스 사진>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이명목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가원(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이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회원들이 '송영길 대표가 투기꾼에게 돈으로 만든 집을 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가 풍선에 적힌 '양심 좀 챙겨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적힌 풍선의 문구를 외치며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부자감세안을 확정된 이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너무도 당연한 시민들의 항의와 비판이다. 집권 기간 내내 집값을 폭등 시켜 집부자의 자산가격을 올려주고, 세금까지 깎아주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게 문재인정부가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우리 복지, 주거,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반서민 부동산 부자감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을 읽어보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신들이 계승했다는 노무현정부에서 만들었고 당시 제1조 목적,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문장은 지금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따르면, 집값이 폭등하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강력히 작동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노무현정부의 계승자라고 말하지 마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자신들이 정한 감세안의 의미를 아는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줄이는 방안은 지금까지 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꿈수이다.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같은 내용을 포장지만 바꿔 ‘상위 2%’로 포장한 것이다. 과세요건 법률주의도 훼손하면서 집부자 감세를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무리수까지 동원했다.

이러면 올해 공동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 3.7%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시가로는 13억원 초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감세 혜택을 받고, 감세액은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다. 말로는 노무현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집부자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집부자의, 집부자에 의한, 집부자를 위한’ 정당이다.

게다가 집권당으로서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은 안중에도 없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한다면 집권당 스스로 집부자를 위해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깨는 행위이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르는가? 서민들에게 더 큰 좌절과 분노를 주며, 집부자들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줄 뿐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도 반서민 정책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라면 시가 9억 원 이하 집을 매도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시가 9억 원 집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더 비싼 집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시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역시 적용되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양도차익은 대폭 줄어들고 세금도 낮아진다. 사실상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양도차익 과세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불로소득 잔치’에 오늘도 하루하루 땀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가 깊어간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종합부동산세를 예정대로 적용하라. 양도소득세 완화도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이다. 집값이 올랐으면 그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조세 상식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다.

문재인정부를 촛불시민정부로 여기는 우리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정책을 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민주당의 배반만큼 우리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도 크다. 집 없는 수많은 서민, 조세정의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바라는 다수 시민은 집부자 감세 정당, 민주당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 부동산 부자감세, 시민은 거부한다!
- 민주당과 국힘당은 ‘부자감세당’으로 합당하라!
- 집부자 감세정당, 민주당 규탄한다!

2021년 6월 25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공기네트워크,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전복지공감,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복지국가시민위원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오늘의행동사회적협동조합,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거중립성연구소수처작주, 참된부동산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한지붕협동조합